

종전 70주년 맞아 중국 對日 역사 공세

유엔 안보리서 “침략 부정하는 이들 있다” 비판

일본 “세계 평화·번영에 다양한 노력” 주장

중국이 2차대전 종전 70주년(8월15일)을 앞두고 일본을 겨냥한 ‘역사 공세’의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일본은 전후 70년 행보에 대한 대외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강화,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왕 이(王毅) 중국 외교 부장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당시 공인된 반파시스트전쟁(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침략(행위)을 뒤집어 죄명을 벗어날려는 이들이 있다”며 “냉전

의 정신은 역사의 휴지통에 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올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총리 재임 중인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런 전력 때문에 아베 총리가 올해를 전후 70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를 발표할 때 전후 50주년과 60주년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지 않을 가

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왕이 부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2차 대전 승전에 대한 중국의 공헌을 강조하며 “중국은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주요병력에 효과적으로 반격을 가했다”며 ‘일본 군국주의’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일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각국 인민의 전체 이익과 인류의 평화와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목적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다”며 “대국인 중국은 넓은 아량을 갖고 있다. 누군가를 겨냥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일본을 대표해 참석한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대사는 “일본은 유엔에 가입한 이래,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바른 자세를 확실하게 알려, 친일(親日) 국가를 늘리고 싶다”며 중국 등의 역사인식 공세에 맞서 자국 입장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또 자국 입장을 홍보하는데 “정부,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올 재팬(All Japan)’ 체제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런던·로스앤젤레스·상파울루에 해외 홍보 거점으로 설치하려 준비 중인 ‘재팬 하우스’를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연합뉴스

IS 또 소수 종교인 집단 납치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집트 콤프고도를 잠수한 데 이어 시리아 기독교도를 집단 납치하면서 중동지역 소수종교 신도들의 수난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IS는 23일(현지시간) 시리아 동부 하사케주(州) 소도시 탈 타머 인근을 습격해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 150명의 시리아 기독교도를 납치했다고 AP 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습격 과정에서 4명이 숨졌으며 수천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납치된 이들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19세기 말 쿠르드족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아시아 기독교도가 모여 살던 곳으로, IS는 쿠르드군과의 교전 끝에 인근 마을을 빼앗고 주민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공 인美图 뉴욕 허드슨강

미국 동부에 평년기온을 훨씬 밑도는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24일(현지시간) 뉴욕 허드슨강에서 선박들이 얼음을 헤치며 운항하고 있다.

앰네스티 “IS 관련 국제사회 대응 부끄러운 수준” 비판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 발간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 무장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해온 대응은 효과가 없으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가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에서 “2014년은 수백만명이 폭력에 노출된 재앙의 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국가·무장단체의 공격이나 분쟁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참모했고 무력했다”며 “각국 정부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능력 밖의 일인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같은 비판의 근거로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 가자지구 교전 등 지난해 주요 분쟁상황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조치들이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이행되지 못한 점을 첫손에 꼽았다.

이 단체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은 형편없이 실패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자국의 정치적 이익이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민간인 보호보다 우위에 놓고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남용

했으며 이 때문에 19만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대량 학살 등 대규모로 이뤄지는 잔혹 행위와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IS나 보코하람, 알샤바브와 같은 무장단체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이들 무장단체가 지난해 전 세계 35개국에 걸쳐 폭력행위를 자행, 인권 상황이 크게 악화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폭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IS 조직원들은 소수종교나 인종을 학살하고 여성을 성 노예로 삼는 등 전쟁범죄를 광범위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연합군은 IS 장악 지역을 무차별 공습했고 이라크 정부 측의 시아파 무장세력은 수니파 인사들을 납치해 처형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지난해 난민 규모가 5000만명에 달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이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사실상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효된 유엔의 무기거래 규제 조약을 모든 국가가 준수해 시리아나 이라크로의 대량 무기 유입을 막아야 하며, 인구 밀집지역을 겨냥한 박격포나 로켓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몰려드는 중국인 때문에 못 살겠다”

홍콩 작년 4720만명 방문 물가 상승 등 문제 시달려 방문객 수 제한 방안 논의

몰려드는 중국인 때문에 물가 상승 등 문제에 시달리는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인 방문객 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은 24일(현지시간) 행정회의 참석 전 “다음 달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중앙정부 인사들과 만나 중국인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3주 연속으로 주말에 벌어진 중국인 입경 반대 시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링 장관은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홍콩 시민의 일상생활이 영향을 받는 점을 알고 있다”며 “다음 달 3일 시작하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관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즉 자유여행(自由行)이 가능한 중국의 국민민정지협상회의)에 참석해 관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자격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즉 자유여행(自由行)이 가능한 중국의 국민민정지협상회의)에 참석해 관광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마이클 텐(田北辰) 신민당(新民黨) 부주석이 최근 자유여행 적용 도시 수를 현재의 49개에서 52개로 늘리는 방안을 전인대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홍콩 시민이 지난 22일 텐 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링 장관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소수 사람들이 시민의 불만을 이용해 소포물 등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근 3주 연속으로 주말에 벌어진 중국인 입경 반대 시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은 2003년 약 800만 명이었지만, 홍콩과 맞닿은 선전 시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 2009년 이후 급증해 작년에는 4720만 명이 달했다.

앞서 알렉시스 탐(譚俊榮) 마카오 사회문화사(社會文化司) 사장(장관격)은 지난 23일 TV 토크쇼에 출연해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인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중국 중앙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마카오를 방문한 관광객 3150만 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중국인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100개 보유 가능

美존스홉킨스대 연구원 분석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윌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조한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이 같은 예측치를 공개했다.

윌트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하고 2020년까지 북한의 핵개발 예측 경로를 ▲저성장 시나리오 ▲중간성장 시나리오 ▲고성장 시나리오로 나눠 소개했다.

우선 핵무기 제조가 100% 늘어나는 전제로 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핵무기의 평균 폭발력은 10kt(킬로톤) 수준으로 예측됐다.

핵무기가 212.5% 늘어나는 중간성장 시나리오에서는 핵무기가 50개로 늘어나 평균 폭발력은 10~20kt으로 증가할

/연합뉴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형화가 진전되면서 단거리 미사일(SRBM)은 물론 이동식 IRBM과 ICBM에도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됐다.

핵무기가 525% 증가하는 최악의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폭발력은 20kt 이상으로 늘어나고 전술핵무기를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윌트 연구원은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100kt의 폭발력을 가진 1단계 열핵(핵융합) 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열핵 폭탄을 실험에 배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윌트 연구원은 북한의 향후 미사일 개발 경로도 ▲최소 현대화 ▲지속적 현대화 ▲최대 현대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최소 현대화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KN-01과 KN-02 등 해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을 함정이나 잠수함에 배치하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의 상당 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상용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윌트 연구원은 밝혔다.

/연합뉴스

전원주택지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1084㎡(328평)
- 33필지 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 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 - 1억 6400만원 (1/2 분할매매 가능)

문의. 010-3605-5000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자
- 감정/시세 - 1억9천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

광전파크 “빌라”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전파크 빌라 5층 중 4층 20평
- 동남향, 2013년 신축
- 방2, 화1, 거실
- 신우 APT 근처, 즉시 입주자
- 매매 - 9900만원 (대출 4900만원 안고)

오피스텔 매매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문의 010-3605-5000

- 17평, 10층
- 20층중 10층, 코너,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수리 매매 - 5천1백만원

- 29평, 10층
- 양동 하천 방향, 전망 좋은 주거겸 사무실, 전체 울 수리 매매 - 7천 2백만원 (일시불 조정가)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 - 1억5천만원정도
- 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 급매가 - 5500만원

근린상가 “지하”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